

총평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7년 국가직 9급 행정학은 예년과 유사하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평이한 시험이었습니다. 대부분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하였으며, 기출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COMPASS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충실히 보고 시험장에 들어간 수험생이라면 만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평가됩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2017년 시험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국가직 9급을 고득점한 수험생들은 자만하지 말고, 예상보다 낮은 성적을 받은 수험생들은 올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봅시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출제유형분석

총론	3	재무행정론	2
정책론	4	정보화사회와 행정	-
조직론	4	행정환류	-
인사행정론	5	지방행정론	2

01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② 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 ③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④ 우리나라도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해설 ① [X] 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한 것은 실적주의이다.
②, ③, ④ [O] 대표관료제는 관료제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고, 실질적 기회균등 및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등과 같은 대표관료제의 임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454

▶ ①

02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 ㄱ. 효율성 강조 | ㄴ. 실증주의적 연구 지향 |
| ㄷ. 적실성 있는 행정학 연구 | ㄹ. 고객중심의 행정 |
| ㅁ. 기업식 정부 운영 | |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ㄹ, ㅁ

해설 ㄷ, ㄹ [O] 신행정론은 행태주의·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적실성 있는 연구를 강조하였다. 또한 고객중심의 행정(민주성)을 강조하였다.

〈신행정론의 특징〉

기존의 행정연구비판	현실적합성 추구, 정책지향적 행정론(정치·행정일원론)
행태주의·실증주의에 대한 비판	현상학적 접근방법의 도입
가치문제의 중시 (사회적 형평성의 가치 강조)	규범적 이론의 발전에 깊은 관심(기존의 전문직업주의, 가치중립적 관리론에 대한 비판)
고객중심의 행정, 능동적 행정의 촉구	일반시민들에 대한 행정의 대응성을 강조
조직에 대한 反전통적 처방	반계서제적, 반관료제적 성향의 구조설계(저층, 분권화)를 처방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127

▶ ③

03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규칙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이 발생한다.
- ②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의는 번문옥례(繁文縟禮)를 초래한다.
- ③ 자신의 소속기관만을 중요시함에 따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나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 ④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非情誼性)을 저해한다.

해설 ①, ②, ③ [○] 목표와 수단의 대치, 번문옥례, 부처할거주의 등은 관료제의 병폐에 해당한다.
④ [×] 관료제는 비정의성(impersonality, 비개인화)은 병폐가 아닌 특성이다. 관료제에서 관료들은 임무수행 시 개인적 이익이나 특별한 사정, 상대방의 지위 등에 구애되는 일 없이 공평 무사함을 유지하도록 요구된다.

〈관료제의 병폐〉

목표대치 — 머튼(Merton)	법규의 엄격한 적용과 준수의 강조로 과잉동조 현상과 목표와 수단의 대치현상이 빚어짐.
번문옥례(red-tape)와 변동에 대한 저항	구조의 경직성 및 법규·절차준수의 강조, 문서주의는 번문옥례를 악화시킴. 또한 쇄신과 발전에 대해 저항적임.
부처할거주의 — 셀즈닉(Selznick)	권위위임과 전문화로 조직구성원들이 조직 전체의 목표보다 자신이 소속된 부서만을 우선시하는 편협한 태도를 취하게 됨.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345

▶ ④

04 계급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의 신분안정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 ② 인력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 ③ 정치적 중립 확보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④ 단체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해설 ③ [×] 계급제는 순환보직을 통해 여러 직무를 수행하므로 행정의 전문성에 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471

▶ ③

0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 ②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
- ④ 기획재정부장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다.

해설 ① [○] 김포시는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은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라. 공공기관

- ② [○]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4조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 ③ [×]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이 지명한다.

동법 시행령 제18조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②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이 지명한다.

- ④ [○]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303, 304

▶ ③

06 정책집행의 상황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 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이다.
- ②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 ③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 ④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한다.

해설 ① [×] 정책지지연합모형은 통합모형에 해당한다.

- ② [×] 정책결정과 집행이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보는 것은 하향식 접근이다.
 ④ [×]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은 하향식 접근이다.

<정책집행의 하향적 접근 VS 상향적 접근>

	하향적 접근(위 ⇨ 아래) : 결정자의 시각	상향적 접근(아래 ⇨ 위) : 현장의 시각
결정과 집행	정책결정과 집행을 분리 (정치행정 이원론)	정책결정과 집행의 통합 (정치행정 일원론)
연구목적	일반론적 · 규범적 처방의 제시 (거시적 · 연역적 접근)	집행현장의 기술과 설명 ⇨ 개별집행문제의 해결(미시적 · 귀납적 접근)
집행의 성공요건	- 정책결정자의 리더십 - 집행과정의 법적 구조화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 능력
집행자	집행자의 결정자에 대한 순응과 집행자에 대한 결정자의 통제 강조	집행자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
단점	- 민주주의체제하에서 명확한 목표설정의 어려움. - 정책반대자의 입장 및 전략적 행동파악의 한계	- 거시적 틀에 대한 간과 가능성 - 선출직 공무원의 결정과 책임이라는 민주주의 기본가치의 위배 가능성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272, 273

▶ ③

07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한 점에서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이론과 유사하다.
 ②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③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내용이론으로 분류된다.
 ④ 작업조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근무태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해설** ① [×] 욕구를 계층화하고, 계층에 따라 욕구의 발로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공통적인 이론은 매슬로(Maslow)와 앨더퍼의 ERG 이론이다.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은 조직구성원에게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이 상호독립 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한 이론이다.
 ③ [○]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은 대표적인 내용이론이다.
 ④ [○] 작업조건은 위생요인 이므로 이를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직무수행의 동기를 유발시키지 못한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391, 393

▶ ①

08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 ②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④ 특허청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 기관에 해당한다.

- 해설** ① [X] 감사원은 헌법상 기관이다. 또한 합의제 행정기관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있다.
- ② [X]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법인이다.
- ③ [X]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이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④ [O] 특허청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371, 383

▶ ④

09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 ②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 ③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 ④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 해설** ① [X] 공익을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은 과정설이다.
- ② [X]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헤겔 등은 실체설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 ③ [O]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실체적·규범적·도덕적 개념으로 파악하며, 공동체를 개인에 우선시키는 견해이므로 개인의 이익이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침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④ [X]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은 공익의 실체설이다.

〈공익의 실체설 VS 과정설〉

구 분	실체설	과정설
공익	•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실체로 존재 (유기체·공동체적 관점, 집단주의적 성격) • 공익과 사익 간 갈등은 있을 수 없음.	• 공익은 사익 간 갈등의 조정·타협의 산물 (자유주의적 관점, 개인주의적 시각) • 사익을 초월한 공익의 존재를 부정
	⇒ 엘리트나 관료에 의해 실체가 규정	⇒ 과정·제도·절차적 국면을 통해 형성
장점	• 대립적 이익 간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	•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한계	• 공익이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규정됨으로써 전체주의 또는 권위주의로 변질될 가능성	• 공익형성과정에서 집단이기주의의 발생과 소수 몇몇 집단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 (조직화 되지 못한 사회적 약자의 이익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89~91

▶ ③

10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기적이며 목표·성과 중심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한다.
- ②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③ 인사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 ④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자원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둔다.

해설 ①, ③, ④ [○] 인적자원관리는 결과와 책임을 강조하고, 신축적이고 분권적이며 적극적인 인사행정이 특징이다. 또한 중앙인사관리기관(인사업무의 책임자)은 인사행정에 있어 정책과 전략 중심의 역할을 한다.

② [×] 인적자원관리(HRM : Human Resource Management)는 개인의 욕구를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조직과 개인 목표의 통합을 강조하며, 조직구성원의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중시한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450

▶ ②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③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④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해설 ②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개정법령집

▶ ②

12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배적인 엘리트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라도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 ② 무의사결정은 중립적인 행동으로 다원주의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 ③ 집행과정에서는 무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④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해설 ① [X] 무의사결정은 기존 엘리트세력의 이익을 옹호하거나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X] 무의사결정론은 신엘리트이론으로 달(Dahl)의 다원론을 비판하며 등장하였다.
 ③ [X] 무의사결정은 정책의 전 과정에서 일어난다.
 ④ [O] 무의사결정은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이거나 현재의 도전에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결정을 말한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199

▶ ④

13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점증모형 - 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이 선택된다.
- ② 최적모형 -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③ 혼합주사모형 - 거시적 맥락의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합리모형의 의사결정 방식을 따른다.
- ④ 쓰레기통모형 -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 우연히 정책이 결정된다.

해설 ② [X] 드로어(Dror)가 제시한 최적모형은 경제적 합리성과 직관·판단력·창의력과 같은 요인을 중심으로 한 초합리성을 고려한 규범적·처방적 정책결정모형이다. 최적모형에서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이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250~257

▶ ②

14 다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간 퇴직 전 (㉡)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 ㉠ | ㉡ |
|------|----|
| ① 3년 | 5년 |
| ② 5년 | 3년 |
| ③ 2년 | 3년 |
| ④ 2년 | 5년 |

- 해설** ① [○]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 3년간 퇴직 전 ㉡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551

▶ ①

15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쉬크(Schick)는 통제-관리-기획이라는 예산의 세 가지 지향(orientation)을 제시하였다.
- ② 영기준예산제도(ZBB)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계획예산제도(PPBS)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 ③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과 성과관리의 연계를 위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④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해설 ② [×] 반대로 설명되었다. 계획예산제도가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프로그램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시킨 예산편성 제도라면, 영기준예산제도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하여, 매년 '0'의 기준 상태에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검토하는 예산제도이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581, 611, 657, 679, 683

▶ ②

16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 ④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해설 ①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설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3항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③ 국가는 지방 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③ [○] 지방자치법 제168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68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④ [○] 1988년 이후의 지방자치법은 포괄적 예시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787, 807, 890

▶ ①

1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 ②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 ③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 ④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다.

해설 ①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계층은 단층제이다.

③ [X] 세종특별자치시에의 관할 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없다.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설치 등)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④ [○]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다.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울산광역시(울주군) 등이 있다.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790~792

▶ ③

18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도한 비용발생을 의미한다.
- ② 지대추구이론은 규제나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행태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 ③ 거래비용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으로 포함한다.
- ④ 대리인이론은 주인-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해설 ① [X] X-비효율성은 정부의 독점적 지위나 특정 민간기업에 정부가 독점적 지위를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과열된 경쟁 X)이다.

〈정부실패의 원인〉

내부성 (사적목표)	관료제 내에서 공익보다는 개인과 조직의 이익(사적목표)을 우선시 하는 현상 . Niskanen의 관료예산극대화모형, Parkinson의 법칙
X-비효율성	경제주체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 관리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부족해 생산의 평균비용이 증가하는 현상. 관리상의 비효율(기술적 비효율)을 의미. 정부의 독점적 지위로 발생
파생적 외부효과	정부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잠재적 · 비의도적 확산효과나 부작용 . 경기회복정책이 경기과잉을 초래, 주택안정화정책이 부동산 투기 조장 등
권력의 편재	권력의 특혜나 남용 등 정부에 의해서 오히려 분배적 불평등이 야기되는 현상 . 특혜적 기업면허, 진입장벽의 유지 등
비용과 편익의 절연	- 공공재의 특성상 수혜자와 비용부담자의 분리로 인해 비용에 대해 둔감해지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현상. 거시적 절연과 미시적 절연이 발생 - 미시적 절연 : 조직화된 소수의 수혜집단이 다수의 비용부담을 요구. 포획을 활용 - 거시적 절연 : 다수의 수혜집단이 소수의 비용부담을 요구. 투표나 선거를 활용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379



19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유형과 예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방송공사
- ② 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
-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한국연구재단
-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한국소비자원

- 해설 ② [X] 한국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③ [X] 한국연구재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④ [O] 한국소비자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구분>

① 공기업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기관(정원 50인 이상)
시장형	자산규모가 2조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기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이상 14개 기관
준시장형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21개 기관
② 준정부기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정원 50인 이상)
기금관리형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16개 기관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연구재단 등 73개 기관
③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이사회설치, 임원임면, 경영실적평가, 예산, 감사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208개 기관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379



20 재정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후예산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 ②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정성 분석,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 분석, 재정운용의 통화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 ③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시작된 대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 ④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제도이다.

해설 ① [X]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전적 관여(사전예산관리)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사전적 관여	사후적 관여
① 중기지방재정계획	① 재정보고서의 제출
② 재정 투자 심사	②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③ 재정운용 업무편람 작성과 예산편성기준	③ 재정벌칙제 - 지방교부세의 감액과 반환
	④ 통합재정정보의 제출

참고 2017 compass 행정학 p.596, 649, 650, 883

▶ ①